죽거나 다치거나 쫓겨나거나!

김현주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소장

10월 25일 대구의 성서공단에서 故 부뚜안님의 1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성서공단의 많은 노동자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 거제, 통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울산 HD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을 비롯해 약 200명 정도가 모였다. 성서공단역에서 출발한 추모행렬은 뚜안 님이 살았던 와룡시장을 지나, 그가 공부했던 계명대학교를 거쳐, 그를 죽음으로 내몬 SJ오토텍 정문 앞으로 이어졌다. 1주기 추모제에 이어 10월 29일에는 대구경북지역 미등록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11월 4일 故 뚜안 대책위 진상조사단의 진상 보고회도 개최된다.

강제 단속으로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다

2025년 10월 28일 베트남 출신 청년 노동자 부뚜안은 공장으로 들이닥친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을 피해 창고 구석 실외기 뒤에 숨어 있다가 3층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윤석열 정권에서 수립된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을 이어받아, 이재명 정권은 25년 4월 1차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9월 30일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차 합동단속 계획[1]'을 밝혔다. 이 보도자료를 본 전국의 이주단체와 민주노총은 합동단속 철회와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미등록노동자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였다. 특히 '사람이 왔다-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네트워크'는 10월 28일 전국의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였다. 단속 추방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상 혹은 사망을 막아보겠다는 간절한 염원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단속반에 의해 청년 노동자가 생을 마감했다.

1) 법무부, '25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10835

이후 약 두 달 넘게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지난한 투쟁이 이어졌다. 당시 용산 대통령실 앞 노숙 농성, 대통령실 이전 후 청와대 분수대 앞 릴레이 108배 등은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절규였다.

마침내 2025년 12월 31일 법무부 이민조사과장과 대구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소장이 뚜안의 유족 앞에 고개를 숙였다. 법무부의 공식적인 사과 방침을 전한 이들은 뚜안님 부모님들의 안정적 체류와 이후 대책 활동을 위한 체류 비자 발급을 약속했다.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을 우선시한 단속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일변도의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미등록 노동자의 단속과 관련한 대화 테이블 구성 제안은 끝내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마무리하였다.

부뚜안의 아버지 부반숭님은 당국의 사과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가족은 기관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과가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65일 동안 뚜안과 우리 가족을 지켜보며 함께 아파하고 연대해 주신 모든 분께서도 이 사과를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이를 통해 관계기관의 책임과 성찰 그리고 변화의 의지를 사회 전체가 함께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주노동자는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한국에 왔으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히는 역설적인 현실을 살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을 노예노동으로 내모는 각종 제도와 법이 이들의 현실을 억누르고, 이러한 법과 제도로 많은 이주노동자가 한순간 미등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불법 사람은 없다. 제도가 불법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는 순간 '죽거나 다치거나 쫓겨나거나'라는 출구가 없는 선택지 앞에 공포의 외줄타기를 하게 된다. 이 외줄마저 끊어버리는 잔인한 폭력이 출입국 당국에 의한 단속 추방이다.

출입국 단속으로 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인정의 의미

그나마 다행은 근로복지공단이 뚜안님의 산재를 승인한 것이다. 그동안 많은 이주노동자단체가 출입국 단속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이주노동자들의 산재 인정을 위해 투쟁해왔다. 뚜안님의 산재 인정이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노동자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조치다. 출입국의 단속 추방 제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폭력일 뿐이다. 정부는 폭력 단속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그리고 우리는 부반숭님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해야 한다. 일터